

행정학개론

해설위원 : 이명훈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 ③ 뉴거버넌스론의 하나인 유연조직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시한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정답] ②

[해설]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분권화, 규제완화 등의 한계를 경계하면서 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집권화·재규제·구조통합 등을 주창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104).

<<핵심체크>> 탈신공공관리론

의의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정치·행정체제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집권화·재규제·구조 통합 등을 주창하는 개혁의 흐름
내용	①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 고려, ②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재집권화·재규제 및 조정 중대), ③ 민영화·민간위탁의 신중한 접근, ④ 총체적(합체된) 정부의 주도(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④ 역할 모호성의 제거 및 명확한 역할 관계의 안출, ⑤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⑥ 자율성과 책임성의 중대, ⑦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⑧ 환경적·역사적·문화적 요소에의 유의 등

02. 다음 조직구조의 유형들을 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는 구조에서 수평적 조정을 강조하는 구조로 옳게 배열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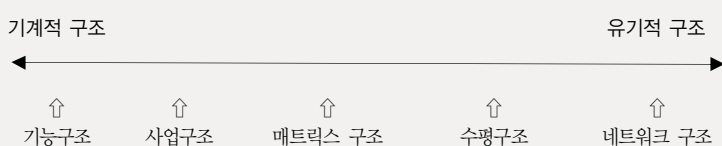
- ㄱ. 네트워크 구조 ㄴ. 매트릭스 구조
ㄷ. 사업부제 구조 ㄹ. 수평구조
ㅁ. 관료제

- ① ㄷ - ㅁ - ㄴ - ㄹ - ㄱ
- ② ㄷ - ㅁ - ㄹ - ㄱ - ㄴ
- ③ ㅁ - ㄷ - ㄴ - ㄹ - ㄱ
- ④ ㅁ - ㄷ - ㄹ - ㄴ - ㄱ

[정답] ③

[해설] 데프트(Daft)는 조직구조의 유형을 기능구조(관료제), 사업구조(사업부제 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구조, 네트워크 구조로 구분하고 이들 조직구조는 기계적 구조(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는 구조)와 유기적 구조(수평적 조정을 강조하는 구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기능구조(관료제 - ㅁ), 사업구조(사업부제 구조 - ㄷ), 매트릭스 구조(ㄴ), 수평구조(ㄹ), 네트워크 구조(ㄱ)로 갈수록 유기적 구조(수평적 조정을 강조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본다(하이패스 행정학 p446).

<<핵심체크>> 데프트(Daft)의 조직구조의 특성과 유형



0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서 이해함을 강조한다.
-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을 강조한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정답] ④

[해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은 제도적 제약 없이 효용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도(문화적 관행으로서 제도)적 제약 안에서 사회적 정당성의 논리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134).

<<오답정리>>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전체)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 행위의 합으로 보고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켜 이해(환원주의적 시각)함을 강조한다.
-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모방적 동형화)를 강조한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경로의존성' 개념을 통해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을 강조한다.

<<핵심체크>> 사회학적 제도주의

의의	사회문화적 환경(문화, 관습 등)과 조직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조직이론을 토대로 인지된 문화적 관행으로서의 제도를 중시하는 접근방법
제도의 개념	• 전통·관습·문화·유행 등 인간의 표문화된 행동을 낳는 모든 것 • 신제도주의적 접근 중 제도를 가장 넓게 인식
제도의 형성	• 동형화 현상 : 인지된 문화적 관행의 동형화 현상으로 제도 형성 • 도구성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정당성의 논리 강조 • 인지에 의한 제도 채택 및 비합리적 제도의 형성 강조
제도의 변화	기존 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때 발생(제도의 환경의존성 강조).
주요내용	• 제도에 대한 시각 : 비공식적 제도 중시 • 인간에 대한 시각 : 내생적 선호(개인의 자율성 부인 - 제도에 종속된 인간) • 제도적 환경과 배태성 중시(결과성의 논리가 아닌 적절성의 논리 강조)
연구방법	• 분석수준 : 거시주의(전체주의) • 현상학(해석학)적 접근 : 개인의 인지 강조 • 문화적·횡단면적 연구(귀납적 분석)
유용성	국가 간 제도의 유사성 및 제도의 형성·확산·재생산 설명
한계	• 제도의 변화과정 설명 미흡 • 미시적 기초 결여 • 조직의 다양한 전략적 대응 무시, 제도화의 이유로서 기술적 능률성 무시

04.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③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
-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정답] ③

[해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면 정부업무평가의 종류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시 자체평가,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 특정평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다시 자체평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합동평가로 구분된다(하이패스 행정학 p388).

<<핵심체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 행정 기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위원회(민간위원이 2/3이상 참여)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함
	재평가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무총리가 정부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특정평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실시해야 함
지방 자치 단체	자체평가	단체장이 자체평가위원회(민간위원이 2/3이상 참여)를 구성하여 평가해야 함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행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합동평가위(행자부 소속)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05.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economy)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본질적 가치다.
- ②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 ③ 가외성(redundancy)은 과정의 공정성(fairness)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 ④ 능률성(efficiency)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effectiveness)은 높을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능률성(efficiency)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정도를,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산출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능률성은 양적 개념인 산출(output)을 중시하고 비용을 고려하지만, 효과성은 질적 개념인 결과(outcome)를 중시하고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능률성이 낮은 대안이 효과성은 높을 수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153).

<<오답정리>>

- ①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합리성(rationality)은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단적 가치이다.
- ②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면,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입법의 의도나 목적에 맞게 상황에 따라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법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 ③ 가외성(redundancy)은 행정체제가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기본 구성요소 외에 잉여요소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과정의 공정성(fairness)과 관련이 없는 수단적 가치이다. 과정의 공정성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한 롤즈(J. Rawls)의 정의론과 관련된다.

<<핵심체크>>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output)을 얻는 것	목표달성도를 나타내는 결과(outcome)지향적 이념	경제성(절약) + 능률성(산출/투입) + 효과성(목표달성도)
산출/투입	산출/목표	산출/투입과 산출/목표 동시에 고려
수단·과정적 측면 중시	목표달성도 중시	수단·과정적 측면과 목표달성도 모두 중시
하위목표적 성격	상위목표적 성격	종합적 성격
구조적 단일목표의 달성 비율	기능적 전체목표의 달성비율	모두 고려
양적, 단기적, 조직내적	질적, 장기적, 조직외적	종합적

06.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 ③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④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정답] ②

[해설] 최적모형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 등의 초합리성을 가미한 현실적이고 규범적이며 전략적인 모형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332).

<<핵심체크>> 최적모형

의의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합뿐만 아니라 초합리성을 가미한 현실적이고 규범적인 모형	
모형선택	합리적 결정의 효과가 비용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만 합리모형 적용	
정책결정과정 (정책과정 전반)	초정책결정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으로 초합리성이 가장 강조되는 단계(7단계)
	정책결정	본래적 의미의 정책결정으로 주로 합리성이 적용되는 단계 (7단계)
	후정책결정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후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단계(4단계)
특징	•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 : 양적분석을 주로 하되 질적 분석(초합리성) 가미 •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대안의 최적화) 중시 • 중첩된 과정과 절차 중시 • 확장된 환류과정을 통한 정책결정능력의 지속적인 고양 • 점증모형의 개선 및 활용 고려 • 정책결정체제의 개선(법적 구조화) 강조	

장점	• 정책결정을 위한 자원, 시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용 용이 • 정책결정체제를 포괄적으로 체계화(거시적·체제적 시각)
단점	• 초합리성의 강조로 신비주의나 주먹구구식 결정을 초래할 위험성 • 불완전한 합리모형에 불과

07.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ㄱ. 인과모형의 설정 ㄴ. 자료 수집 및 분석
ㄷ. 정책목표의 확인 ㄹ. 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
ㅁ. 평가 결과의 환류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② ㄴ → ㄷ → ㄱ → ㄹ → ㅁ
- ③ ㄷ → ㄹ → ㄱ → ㄴ → ㅁ
- ④ ㄹ → ㄱ → ㄴ → ㄷ → ㅁ

[정답] ③

[해설] 정책평가의 절차는 정책목표의 확인(ㄷ) → 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ㄹ) → 인과모형의 설정(ㄱ) → 자료 수집 및 분석(ㄴ) → 평가 결과의 환류(ㅁ) 순으로 이루어진다(하이패스 행정학 p370).

<<핵심체크>> 정책평가의 의의

개념	정책성과와 정책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비정치적 전문활동	
비교	• 정책분석 : 합리적 대안선택을 위한 사전적 · 미래지향적 활동 • 정책평가 : 선택된 대안이 집행된 후 그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사후적 · 회상적 활동	
필요성	역사적 측면	국립무료유아원사업의 평가보고서의 발표, 계획예산(PPBS)의 실패
	이론적 측면	• 정책의도와 집행의 괴리(정책집행에 대한 불신) • 사업 운영의 효율성 증진 • 관리적 책임성 확보 • 정책개선과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 정책과정의 복잡성 및 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
목적	• 의도한 정책목표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 정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 정책 성공을 위한 원칙 발견과 향상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들을 재확인하기 위해	
과정	① 목표의 확인 ⇒ ② 평가성 사정을 통한 평가대상 및 기준의 설정 ⇒ ③ 인과모형의 설정 ⇒ ④ 연구설계의 개발 ⇒ 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⑥ 평가결과의 환류	

0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 ②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 ③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이다.
- ④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구조이다.

[정답] ①

[해설] 관료제와 대비되는 개념인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보다는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적응성이 필요한 상황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에서 다수의 전문요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성을 제고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454).

<<핵심체크>>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의의	다양한 전문기술을 가진 비교적 이질적인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가 빠르며 적응적이고 일시적인 체제(유기적인 탈관료제 조직)
특성	① 낮은 수준의 복잡성(낮은 수준의 수직적 분화와 높은 수준의 수평적 분화), ② 낮은 수준의 공식성, ③ 낮은 수준의 집권성
형태	매트릭스 조직, 태스크포스, 팀제, 위원회조직, 동료형(칼리지) 조직 등
장점	① 조직의 적응력과 창의성 증진, ② 다양한 전문 요원들의 협동적 노력이 요구될 때 유용, ③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 증진, ④ 기술혁신의 촉진, ⑤ 문제해결능력 증진 등
단점	① 권한과 책임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상존, ② 역할모호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③ 정확성과 편리성의 결여로 인한 비효율성 등

09.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의 관점과 측정지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① 학습과 성장 관점 - 직무만족도
-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 민원인의 불만을
- ③ 재무적 관점 - 신규 고객의 증감
- ④ 고객 관점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정답] ①

[해설] 균형성과표(BSC)는 조직의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이라는 네 관점의 핵심성공요소를 측정 가능한 핵심지표(KPI)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 이상의 관리철학이다. 이 중 민원인의 불만을(②)과 신규 고객의 증감(③)은 고객관점이며,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④)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502).

<<핵심체크>>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의 의의와 측정지표

의의	조직의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이라는 네 관점의 핵심성공요소를 측정 가능한 핵심지표(KPI)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 이상의 관리철학(칼프란과 노튼)
측정 지표	재무관점(과거시각,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시장점유율, 원가절감율 등
	고객관점(외부시각)
	고객만족도, 정책수용도, 민원인의 불만을, 신규 고객 증감 등
내부 프로세스 관점(내부시각)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 적법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공개 등
	학습과 성장 관점(미래시각, 선행지표)
	학습 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 만족도 등

10. 오늘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하위정부(subgovernment)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 ③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
- ④ 정책문제망(issue network)

[정답] ③

[해설]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에는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이슈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음매 없는 조직은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이 아니라 조직의 유형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272).

11. 다음 중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계획예산제도
- ② 목표관리제
- ③ 영기준예산제도
- ④ 다면평가제

[정답] ①

[해설]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이 조직의 상층에서 결정되는 거시적·하향적 예산제도로 하급 공무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중앙집권화될 우려가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745).

<<핵심체크>> 계획예산제도(PPBS)

개념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한 예산
도입	존슨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1965년)
편성	① 장기계획의 수립(planning : 목표설정) ⇒ ② 사업구조의 형성(programming : 시스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범주, 하위 범주, 프로그램 요소 작성) ⇒ ③ 예산편성(budgeting)
특징	① 목표지향적 예산, ② 장기적 예산, ③ 하향적·거시적 예산, ④ 합리적 예산, ⑤ 계획책임의 집중화, ⑥ 효과성과 능률성 중시, ⑦ 과학성·객관성 추구(비용편익분석 등 객관적인 회계기법 활용), ⑧ 개방체제적 성격(부처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가체제적 관점에서 예산편성), ⑨ 전문가의 역할 중시, ⑩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에 관심, ⑪ 정책별 예산배분(예산을 부서별로 배분하지 않고 정책별로 배분)
장점	① 최고 관리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②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③ 장기사업 중심의 예산, ④ 체제적 관점, ⑤ 객관적 의사결정(체제분석기법의 활용), ⑥ 목표·계획·사업의 유기적 연계, ⑦ 연동계획과 연계시 신속성 제고
단점	① 목표설정 곤란, ② 중앙집권화 야기, ③ 사업구조와 예산과목 구조의 불일치로 인한 복잡한 환산작업 야기, ④ 재정민주주의와 충돌(국회의 지위 약화 초래), ⑤ 환경변화의 적응 곤란(장기사업의 구속력으로 인한 경직성), ⑥ 과도한 문서와 정보량 요구, ⑦ 지출내역 파악 곤란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② 준시장형 공기업
-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
- ④ 기타공공기관

[정답] ③

[해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다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하이패스 행정학 p473).

<<핵심체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공기업 (30)	의의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시장성이 강한 기관)		
	유형	시장형 (14)	개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총수입액의 85%) 이상인 공기업
			예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16)	개념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예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준정부기관 (90)	의의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공공성이 강한 기관)		
	유형	기금관리형 (16)	개념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예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위탁집행형 (74)	개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등
기타 공공기관(20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지정		

1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내용과 효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하이패스 행정학 p670).

<<오답정리>>

-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핵심체크>> 공무원 징계의 종류

경징계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징계절차에 의하고 인사기록에 남음(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1/3을 감함(12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3급으로,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전문경력관과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하지 않음)

충진제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영향이 없음(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8 ~ 1/4를 감함)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 이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 1/2를 감함(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를 감함)

14.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 ③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 ④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지양한다.

[정답] ②

[해설]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하는 예산이론은 점증주의 예산이론이다(하이페스 행정학 p728).

<<핵심체크>> 총체주의 예산이론과 점증주의 예산이론

Key의 질문	'어떠한 근거로 X달러를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을 역설 -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합리주의와 점증주의의 대두	
구 분	합리주의(총체주의)	점증주의
인간	전지전능성과 경제적 합리인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존재
강조점	경제원리(과학성)	정치원리(정치성)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미시적 과정	총체적·체계적 분석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거시적 과정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	당파적 상호 조정
기 준	사회후생극대화(파레토 최적)	분배의 형평성
결과	신규사업, 대폭적·체계적 변화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 변화
목표수단분석	가능(목표는 주어진 것)	불가능(목표 조정 가능)
대안고려	모든 대안의 고려(전체적 분석)	한정적 대안만을 고려(부분적 분석)
결정방향	거시적·하향적 결정	미시적·상향적 결정
분석수준	총액지향적	세부사업지향적
초 점	체제예산(합리적 과정)	과정예산(비합리적·비포괄적·무계획적 과정)
결정방식	체계적·포괄적·분석적 결정	계속적·분할적·분산적 결정
최적화	총체적·체계적 최적화	부분적 최적화
성 격	단한 예산(집권성)	열린예산(분권성)
관련제도	PPBS, ZBB	PBS, LIBS
성 향	개혁성(쇄신적 예산결정)	보수성(현상유지성향)
이론구성	수리적·계량적·연역적 분석	실증적·귀납적 분석
접근	규범적·이상적 접근	현실적 접근

15.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②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④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정답] ①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원칙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	③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례금)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16.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은?

- ① 품목별 분류
- ② 기능별 분류
- ③ 경제성질별 분류
- ④ 조직별 분류

[정답] ②

[해설] 기능별 분류는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예산의 전체 윤곽을 밝히는데 유용하며, 시민이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한다(하이페스 행정학 p720).

<<핵심체크>> 예산의 분류

품목별 분류	의의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방식(우리나라의 '목')
	특징	행정학 성립 초기에 강조된 분류방식으로 보통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하여 활용
	장점	① 예산집행자의 회계책임 명확, ② 인사행정에 대한 유용한 자료·정보 제공, ③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 용이, ④ 행정통제 용이, ⑤ 명세계정에 적합
	단점	① 정부지출의 전체규모·지출목적·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곤란, ② 예산집행의 신속성 저해, ③ 새로운 사업의 창안이나 촉진 곤란, ④ 국민의 이해 곤란, ⑤ 지나친 세분화로 번문목례 초래(총괄계정에 부적합), ⑥ 사업의 성과파악 곤란
기능별 분류	의의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우리나라의 '장', '관')
	특징	• 세출예산에만 적용이 가능 • 기능별 분류의 대항목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음 • 시민이 국가예산의 잘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 • 사업별·활동별 분류와 연계되므로 성과주의예산에 가장 적합 • 예산의 전체 윤곽을 밝히는 데 유용하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예산개요(나라살림)의 작성에 활용
	장점	① 국민의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 용이(시민을 위한 분류), ② 의회의 예산심의 용이, ③ 행정수반의 예산정책 수립 용이, ④ 정부활동의 우선순위 파악 용이, ⑤ 장기기에 걸친 정부활동 분석 용이, ⑥ 총괄계정에 적합 등
	단점	① 회계책임 확보 곤란(입법통제 곤란), ② 기관별 예산의 흐름(정부예산의 유통과정) 파악 곤란, ③ 예산의 국민경제적 효과 파악 곤란, ④ 특정사업이 두 개 이상의 기능에 속하는 경우 분류 곤란

조직별 분류	의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조직단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장점	① 입법부의 예산통제 용이, ② 경비지출의 책임소재 분명, ③ 예산과정 단계의 명확화, ④ 국회의 예산심의 용이, ⑤ 비교적 총괄계정에 적합, ⑥ 주체별 구분으로 예산집행 용이
	단점	① 경비지출의 목적 파악 곤란, ② 예산의 경제적 효과 파악 곤란, ③ 조직 활동의 성과 파악 곤란, ④ 사업계획의 효과 평가 곤란, ⑤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곤란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조직별 예산편성단위는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일치하지 않음 • 세출예산서상 중앙관서의 수와 세입예산서상 중앙관서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
경제성질별 분류	의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
	장점	①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② 국가 간 예산 경비의 비중 비교, ③ 정부예산의 국민경제적 효과 파악 용이, ④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용이
	단점	① 경제적 영향의 일부만 측정 가능, ②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하여 사용, ③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유용하지 않음, ④ 소득배분 · 산업부문별 영향분석 등은 불가능
	우리나라	통합예산, 재정충격지표, 국민경제예산, 완전고용예산 등

17. 예산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②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③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성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정답] ④

[해설]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성의 원칙은 이용과 전용 등의 예외장치를 두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690).

<<핵심체크>> 고전적 예산원칙과 예외 장치

예산원칙	개 념	예 외 제 도
사전의결의 원칙 (절차성의 원칙)	예산은 집행이전에 입법부에 의해 먼저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긴급재정경제명령 · 처분, 단체장의 선결처분
엄밀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은 되도록 일치되어야 하므로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하고 불용액이나 불법사용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예산의 신속성 확보 장치들
예산총계주의 (완전성 · 포괄성의 원칙)	예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순계예산,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의 현물출자, 전대(轉貸)차관
공개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우리나라 일부 국방비 · 외교활동비 · 정보비, 신임예산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하나의 장부에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명확(료)성의 원칙	예산은 예산구조와 과목이 단순하고 명확하여 국민과 국회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예산 공개의 전제조건)	총액계상예산(총괄예산),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 · 비영향의 원칙)	• 예산은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연계하면 안 된다는 원칙 • 정부의 모든 수입은 국고로 편입되고 여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수입금 직접사용 금지)	특별회계, 기금, 수입대체경비, 수익금마련지출제도, 목적세(국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 준 목적범위 내, 규모범위 내, 시간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 목적(질적) 한정성 예외 : 이용, 전용 • 규모(양적) 한정성 예외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 시간(기간) 한정성 예외 :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 수입, 과년도 지출

18.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버스 앱은 공공 데이터의 무료 개방에 따른 부가서비스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울버스 앱'의 기반이 되는 웹 기술은?

- ① 하이퍼링크 중심의 Web 1.0 기술
- ②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
- ③ 시맨틱웹(Semantic Web) 기반의 Web 3.0 기술
- ④ 사물인터넷 기반의 Web 3.0 기술

[정답] ②

[해설]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웹(Web) 기술을 말한다. '서울버스 앱'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이 콘텐츠를 개발한 것으로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이 활용된 것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189).

<<오답정리>>

- ① 하이퍼링크 중심의 Web 1.0 기술이란 인터넷에서 특정 문자나 그림을 클릭하면 이와 관련된 다른 문서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문서 간에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 ③ 시맨틱웹(Semantic Web) 기반의 Web 3.0 기술이란 차세대 인공지능 웹으로 웹상의 데이터가 의미를 지니는 지식정보가 되는 기술(의미론적 웹 - mouse가 쥐를 의미하는 것인지, 컴퓨터 기기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보제공)을 말한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인간만이 이해하는 웹이 아니라 기계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웹이 구현되며, 이를 통해 지능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 ④ 사물인터넷 기반의 Web 3.0 기술이란 모든 사물에 센서나 탭, 통신기능을 넣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사물들이 모두 상호작용하여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전달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또는 IT기술을 의미한다.

<<핵심체크>> 인터넷 진화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구분

구분	웹(Web) 1.0	웹(Web) 2.0	웹(Web) 3.0
시기	1995년 ~ 2000년	2005년 ~ 2010년	2015년 ~ 2020년
기술기반	하이퍼링크 기반 • World Wide Web • 브라우저, 웹 저장	플랫폼 기반 • 브로드밴드, Rich Link/Content Models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반 • Real-World Web • 시맨틱웹, 사물인터넷(센서 네트워크)
특징	하이퍼텍스트 위주의 웹 환경으로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 링크 위주의 웹 사이트 연결	정보를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도구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부가가치 창출(개방, 공유, 참여 및 상호작용 등 연결성 강조)	시맨틱웹과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선제적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접근성	정부중심 • First-stop-shop • 단일 접속창구(포털)	시민중심 • One-stop-shop • 정부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개인중심 • My Gov't • 개인별 정부서비스 포털
채널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유 · 무선 모바일 기기 통합(채널 통합)
업무통합	단위업무별 처리	프로세스 통합(공공 · 민간의 협업)	서비스 통합
서비스	• 일방향 정보 제공 • 제한적 정보 공개 • 서비스의 시간 · 공간 제약 공급 위주 서비스 • 서비스의 전자화	• 양방향 정보제공 • 정보 공개 확대 • 모바일 서비스 • 정부 · 민간 융합서비스 •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 개인별 맞춤(상호작용형) 정보제공 • 실시간 정보 공개 • 중단 없는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서비스의 지능화

1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 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정답] ④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 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하이패 스 행정학 p922).

<<핵심체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갈등 원인	• 국책사업(형오시설 입지 등)과 관련된 갈등 :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사무권한 귀속과 관련된 갈등 : 대부분 현재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해결
	• 재원 및 재정부담과 관련된 갈등 :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지방재정부담 증가) 등
	행정적 분쟁조정 •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 위임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 등
분쟁 조정	사법적 분쟁조정 • 헌법재판소 :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 :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처분 및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심판 등
	국무총리 소속 협의 조정기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 원회를 둠 • 신청에 의해 조정하며, 조정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은 조정사항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이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음
	인사교류 •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협조 증진 및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2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 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②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사·감사를 시행한다.
- ③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통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본다.
- ④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해설] 기관위임사무란 직접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858).

<<핵심체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개 념	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근 거하여 자기의 의사와 책 임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 하는 자치단체의 존립 목 적에 속하는 본래적 사무	전국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 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로서 개개의 법령에 의하여 자치 단체에 위임된 사무(결정 은 의회, 집행은 단체장)	직접적으로 지방적 이해 관계가 없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해 단체장에 위 임한 사무(결정은 중앙정 부, 집행은 지방정부)
특 징	자주성이 강함	중앙의 통제 약함	중앙의 통제 강함
재 정	• 자주재원과 지방교부 세 • 국고보조금은 장려적 보조금	• 국가가 사업비 보조 • 국가의 보조금은 부담금	전액 국비 부담(지방재정 법상 교부금 또는 강학상 위탁금)
의회관여	지방의회의 통제대상		원칙적 배제
국가관여	합법적·사후적 감독 (사전적·합목적적 통 제 불가)	사후적·합법적·합목적 적 감독(사전적 통제 불가)	사전적·사후적 통제, 합 법적·합목적적 통제 가 능
배상책임	자치단체 책임	국가·자치단체 공동책임	국가책임
위임근거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개별적인 법적 근거 필요	지방자치법이 포괄적 위 임규정을 두고 있어 개별 적인 법적 근거 불요

구체적인 예	• 자치단체의 존립·유 지에 관한 사무(주민 등록 사무 등)	• 생활보호 사무, 의료보호 (보건의료 설치 및 운영, 예 방접종 사무),	• 대통령·국회의원 선 거사무
	• 지방의 공동복리에 관 한 사무(학교, 병원 및 도서관의 설치·관리, 도로의 건설 및 관리, 상·하수도 사업, 주 택사업, 오물처리, 교 통, 도시계획, 소방, 지 역 민방위 등)	• 시·도의 재해 구호 • 하천 및 국도의 유지 및 수선 사무 • 시·군의 국세 징수 및 수 수료 징수, 점용료 징수, 공과금 징수	• 인구조사, 국세조사, 산 업통계 등 전국적 통계 • 지적, 공유수면매립 • 가족관계등록 사무 • 경찰사무 • 병사사무 • 도량형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③	④	③	④	②	③	①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